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2026. 6.

관계부처 합동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요약]

1. 추진 배경

- 최근 현대전이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과 민군 기술 협력 (Spin-on/off)의 중요성이 부각
- 미국은 안보·방산에서 시작하여 민간시장까지 확장한 팔란티어* 등 혁신기업이 성장 중이나, 한국은 안보 분야에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

* 팔란티어 매출액('25년, 44억달러) : 정부(24억달러, 54%), 민간(20억달러, 46%)

⇒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미래 혁신기업 육성

기대효과 ⇒ 기존 방산 성과에 이어, AI 등 첨단 신안보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매김

* '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천억원 기업 50개 육성

2. 주요 추진과제 ⇒ 안보·산업 선순환으로 테크 안보 강국 도약

①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 (전략분야 지정) Top-down 정부 주도의 수요기반과 Bottom-up 민간 제안 기반을 병행하여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를 발굴 및 지정
 - * 무인·자율 및 로봇틱스(중기부, 산업부, 방사청), 초지능·AI 반도체(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차세대 국방 센서·미래소재(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우주청, 방사청)
- (혁신기업 선정) 우수기업 Pool^{등록} → 후보기업^{지정} → 혁신기업^{지정}
3단계로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 * (예시) 후보기업 우수기업 Pool + 기업가치 300억원 + 소요 기술역량 + 성장 가능성
혁신기업 후보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 민·군 겸용 기술 보유

②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

- (한국형 OTA 도입) 혁신기업 기술·제품 신속조달을 위해 구매연계 R&D 확대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 촉진형 계약(경쟁적 대화) 도입*
- * 혁신기업 가점 부여, 마일스톤 대금 지급,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 특례 도입

- (첨단기술 획득제도 개선) 공모형·애자일 획득체제로 전환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 (첨단전력사업법 제정)
-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 검토

③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국방 소요)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하여 필요한 실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선도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개발 지원
- *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
- (공공 소요) R&D-실증-구매로 이어지는 OTA와 가장 유사한 구매 연계 R&D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원
- * 구매연계 R&D(현행, 2년 6억원) → 신안보 분야, R&D 20억원/연 + 고도화실증 20억원
- (실증 지원) 개발 기술이 신안보 분야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
- * (예시) 드론실증부대(36사단), 양평훈련장 등 활용하여 드론 실증 지원

④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

- 정부가 혁신기업·후보기업의 리스크를 전담하여 직접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 (한국형 IQT) 신설
- * KVIC 자회사로 설립하고, KVIC과 정부(중기부, 방사청 등) 공동 출자
- 중기부·방사청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하여 '27년 500억원 (중기부·방사청 각 250억원) 조성 후, 4년간 매년 추가로 재원 마련 (정부재원 100% 조성)

⑤ 민·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

- 정부와 개발기업은 IP를 공동 소유하며,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인정 (단, 위원회 심의로 예외적 제한)
-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칭}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 설립 및 사업화·상용화, 해외 진출 등 지원

⑥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이행을 위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26년 발의),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위원장 총리) 및 추진단 설치 등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4
III. 세부 추진과제	5
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5
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	7
3.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10
4.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	11
5. 민·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	12
6.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13
IV. 향후 추진계획	14

I. 추진 배경

1. K-방산 현주소

- K-방산은 과거 무기 수입국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무기 자체 제작 단계를 거쳐, 현재 체계장비 수출 확대에 '방산 4강'에 진입

* K-방산 세계 순위 및 점유율(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단년도)

: ('23) 11위, 2.3% → ('24) 8위, 3.6% → ('25) 4위, 6.0%

** '25년 글로벌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SIPRI, %) : ^{1위}미국(42.0), ^{2위}프랑스(10.0), ^{3위}이스라엘(7.8), ^{4위}한국(6.0), ^{5위}러시아(5.8), ^{6위}이탈리아(5.7), ^{7위}독일(5.1), ^{8위}중국(2.6)

- 자주포, 미사일, 전차 등 방산 대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방산 빅4(한화, LIG Nex1, KAI, 현대로템) 대기업('25) : 매출액 40조 4,526억원, 영업이익 4조 6,324억원(전년비 74% 증가)

- 다만, 기존 체계기업 중심의 방산구조가 지속되어 AI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이 미흡

* 중소기업 매출 비중 : 전산업(44.9%), 방산(17.9%)

('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4년 기준 방위산업 실태조사)

2. 현대전의 패러다임 전환

- 최근 러-우 전쟁과 미-이란 중동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

- 스타트업 등의 혁신 기술이 결합된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무기가 전장의 주역이 되고, AI가 '전쟁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

* 약 500달러 수준의 드론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군사장비·시설 파괴

** 이스라엘 '라벤더'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수백 개의 타격 목표를 생성

- 특히, 현대·미래전의 핵심은 '탐지-결심-타격' 구조이며, 기존 방산이 타격 중심이었다면 향후 탐지·결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탐지) AI 영상·신호 분석, (결심) 데이터 융합, 지휘통제, (타격) 정밀유도무기 등

3. 민간의 혁신기술 활용과 혁신기업 육성 필요성

□ 각국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 기술의 군 도입 (Spin-on)과 국방 기술의 산업화 (Spin-off)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

□ 전통적인 국방 기업은 ‘군 전용’ 납품으로 판로가 제한되나, 민간 혁신기업은 민-군 범용성 (Dual-use)을 기반으로 성장 기회가 확대

* 팔란티어 매출액('25년, 44억달러) : 정부(24억달러, 54%), 민간(20억달러, 46%)

⇒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중요 기반이 되고, 새로운 안보 기술이 민간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기회가 창출

□ 미국, 독일은 정부의 장기투자, 데이터 접근, 대규모 정부계약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방산 기업 이외에 팔란티어·헬싱* 등 혁신기업이 성장

* 헬싱('21년 설립) : AI 기반 SW·자율무기·드론 개발, 기업가치 180억 달러(추정)

○ 이에 반해, 한국은 방산 등 안보 분야에 신기술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

* '24년 방위산업 참여 529개 업체 중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개(3%)에 불과

□ 안보 기술을 특정기업·국가에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 차단 등 서비스 연속성 저해, 정보유출 및 통제권 약화로 국가안보 위험 증대

⇒ 안보 분야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미래 혁신기업을 육성

◆ (기대효과) 국가 안보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방산 시장 선점

○ K-팔란티어를 육성하여 체계기업 중심 방산수출을 AI 기반 신안보 수출로 확장 및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 성장 환경 조성

○ 기존 방산 성과에 이어, AI 등 신안보 경쟁력을 더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 매김

< 참고 > 해외 안보 혁신기업 사례

구 분	기업 가치	주요 기술	성장 배경
팔란티어 (’03 설립) 	3,280억 달러 (480조원)	- 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Gotham) - 대규모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 지원 - AI 전장 운영체계(AIP) 구축	- CIA 투자기관인 IQT에서 초기 투자(200만불) - CIA·FBI 분석가와 협업 시제품 개발(Gotham) - 미 국방정보기관 공공조달(ODNI 정식 계약)
앤두릴 (’17 설립) 	600억 달러 (89조원)	- AI 자율 무인기 및 무인 잠수정 기술 - Lattice OS(AI 기반 OS) 자율전투체계 - 실시간 센서융합·표적 추적기술	- 자체 개발 제품을 애자일(Agile)* 방식으로 성능 개선 * 짧은 주기로 개발 반복 수행 - 신속 조달제도(OTA)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헬싱 (’21년 설립) 	180억 달러 (26조원)	- 자율드론·유무인 복합 체계기술 - AI 기반 전장상황 분석 플랫폼 - 다중센서 융합 및 실시간 전장 의사결정 지원	- HW 완제품이 아닌 업데이트가 가능한 SW의 ‘혁신 조항(Innovation Clause)’ 계약 체결 - 장기간 반복 구매가 가능한 프레임워크(Framework) 계약 및 납품
미자르 비전 (’21년 설립) 	미공개 (비상장)	-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및 객체 탐지 기술 - 군용 항공기·함정·방공 체계 자동 식별 기능 - 실시간 지리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 군민융합 정책 펀드* 등을 통한 범용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 * 민간 혁신을 군사 분야에 응용 (’25년 약 13조 규모 펀드 조성)

Ⅱ. 추진 방향

비전	안보·산업 선순환으로 테크 안보 강국 도약
목표	▶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육성(~30년) ▶ 신안보 매출 1천억 혁신기업 50개 육성(~30년)



기업 발굴	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 ▶ 미래 신안보 혁신·후보기업 지정
첨단 기술 획득	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	▶ 한국형 OTA 도입 ▶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개선
	3.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국방·공공 소요 맞춤 R&D 지원 ▶ 실증 지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기업 성장 지원	4.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	▶ 전문 투자기관(한국형 IQT) 신설 ▶ 단계별 투자 체계 구축(초기, 후속)
	5. 민·군 범용기술 신시장 진출 촉진	▶ 지재권 보장, 1조원 이상 펀드 조성 ▶ 사업화·상용화, 대기업 협업 해외 진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및 추진단 구축

Ⅲ. 세부 추진과제

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

- (Top-down) 현재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기술 도입이 시급한 전략분야는 소관 부처*에서 제안

* 중기부, 국방부, 산업부, 국정원,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 소요 제기

- (Bottom-up)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기업이 제안한 혁신 기술분야를 소관부처 검토를 통해 발굴

□ 혁신기업 강점 기술 현황

※ 관계부처 제안 및 혁신기업의 경쟁력 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도출

① 무인·자율 및 로봇틱스 (중기부, 산업부, 방사청)

- (지능형 드론) AI 기반 자율 표적 식별, 다수 무인기 협업 타격 체계
- (다목적 자율 로봇) 험지 기동형 수색·운반·위험물 제거 임무 하드웨어

② 초지능 및 AI 반도체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 (국방 AI 체계) 전장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속 의사결정 시스템 등
- (국방 전용 AI 반도체) 무기체계 탑재용 저전력·고성능 온디바이스 칩

③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 (초소형 레이더·광학 센서) 소형 드론 포착의 정밀 센서 등 탐지망 구축
- (극한 환경 신소재) 극초음속 비행 시의 초고열·고충격을 극복하는 특수 소재 등 미래형 무기체계 활용 소재 개발

④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 (우주청, 방사청)

- (초소형 위성망) 저궤도 위성 배치를 통한 24시간 상시 감시 및 통신망
- (무인 항공 플랫폼) 스텔스 기술 및 유·무인 복합 장비(MUM-T) 운용 등

⑤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 기술(국정원, 과기부)

- (능동형 사이버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및 양자 내성 암호체계
- (양자 통신·컴퓨팅) 도청 불가능 통신 및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 등

□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중소·중견기업) 선정

- (운영체계) 3단계 체계(우수기업 Pool^{등록} → 후보기업^{지정} → 혁신기업^{지정})로 운영하여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정기준) 우수기업Pool은 부처별 추천기업*을 리스트화하여 등록·관리하며,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은 혁신성·성장성을 검증**
 - *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방산혁신기업 등
 - ** (예시) ^{후보기업} 우수기업 Pool + 기업가치 300억원 + 소요 기술역량 + 성장 가능성
^{혁신기업} 후보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 민·군 겸용 기술 보유
- ※ 공공투자(한국형 IQT)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즉시 지정
- (평가방법)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 평가
 - * (예시) 방산 관련 기술 : 기술력(인증), 군 활용성 등
- (사후관리) 후보기업은 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혁신기업은 성장 성과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위)하여 최대 5년 지정(3년 후 평가 + 2년)

< 혁신기업·후보기업 선정 방안(안) >

우수기업 Pool 등록	후보기업 지정	혁신기업 지정
■ (기준) 전략분야에 관련 기술·경험 보유 기업 * 벤처기업, 방산혁신기업, 방산업체, DQ인증기업 등 ■ (등록) 부처별 추천 및 등록	■ (기준) 우수기업 Pool + 기업가치 300억원 + 소요 기술역량 등 * 기준 이외 공공투자(한국형 IQT) 지원기업 등 즉시 지정 ■ (지정) 기업신청(우수기업 Pool) → 검증 및 지정 ■ (기간) 지정 3년 후 재평가	■ (기준) 후보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 민군 겸용 기술 ■ (지정) 기업신청(후보기업) → 검증 및 지정 ■ (기간) 3년 후 평가 + 2년

⇒ 전략분야 선정 및 혁신기업·후보기업 지정은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한국형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도입 (재경부, 중기부 등)

- (제도 개요)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이 **빠르게 계약·실증·구매로 연결되는 조달체계 구축**

* 기업 아이디어 제안 + 부처 소요 → 정부 투자 및 R&D 수행 → 성공 시 즉시 구매

** 재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

- (운영 방안)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전에 확정된 경우
① **수의계약** 또는 ② **혁신 촉진형 계약(경쟁적 대화)** 도입을 통해 신속 구매 추진

①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과 구매조건부 R&D 확대

② 복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목표물 도출 및 계약자 선정·구매로 이어지는 방식

- 신안보 전략분야의 혁신기업이 ‘**혁신 촉진형 계약**’을 통해 입찰 시 차등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혁신기업이 특수 기술·수행능력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대상자 선발

* (예시) 수요기관의 특수한 성능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계약 등

-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의 시제품이 당초 설정한 목표 수준을 달성하면, 보안·기술유지·우선권 보장 등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 기타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IP 소유권 보장, 예정가격 산정 유연화 등 추진

□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개선 (국방부, 방사청)

*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 **공모형 획득 방식을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

* (현행) 군이 정량적 성능·제원 제시 → (개선) 민간에서 군사적·산업적 필요성 제시

- 군 요구 사항 100% 충족 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 방식을 군이 **우선 사용하면서 점차 성능을 개선하는 진화적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

* 초기 버전을 빠르게 전력화하고 짧은 주기로 실증-평가-개발 반복 수행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

국방드론 도입 확대 · 신속 추진 방안

1. 국방드론 도입 추진현황

- (과거) 중대형·정찰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 및 도입에 집중
 - * 세계적 수준의 국산 중고도정찰무인기 (MUAV, '26. 4월 1호기 출고) 올해 첫 전력화 예정
- (현재) 민간의 소형드론 기술 발전, 러-우 전쟁 이후 드론 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소형 정찰·공격용 드론 도입 확대 중
 - * 소형정찰·공격드론 등 32종 4,300여대를 운용 중이며, 34종 2,800여대의 드론 도입 추진 중
 - * 소형드론에 대한 군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소요 창출을 위해 국내·외 드론 신속 구매

2. 향후 드론 신속 도입 및 확대방안

① 소형 드론 조기 확보

- (임무 및 운용부대 다양화) 군집형, 소부대, 시가전 등 다양한 임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능이 향상된 소형드론 도입 추진
 - AI 탑재 군집드론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타당성 조사 병행 추진 중
 - 소부대 타격 및 정찰능력 보강을 위한 1.8만여대의 드론* 소요 기획 중
 - * 초소형정찰드론, 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 소형대인·대장갑자폭드론 등
 - ↳ 한국형 저가형 자폭드론(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 (K-LUCAS) 적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차량(TEL)의 공격 등 킬체인 전력을 보완하는 저비용 고효율 자폭드론을 단기간 대량 확보
 - * 현재 핵심기술 개발간 시험비행 중으로 '27년부터 시제기 시범운영 예정
- 공통플랫폼, 모듈화를 통해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엔진 등 주요부품 국산화를 통해 저비용·대량생산 기반 마련

②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군이 국산 상용드론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및 국산화 촉진 등 드론생태계의 마중물 역할
 - 교육용 드론을 '26년 1.1만여대, '27년부터 매년 1.7만여대 지속 도입
 - 복수낙찰제를 적용하여 다수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국산화 가이드라인을 제정('25.12월)하여 입찰 희망업체(14개) 대상 국산화 검증 중

3 민간드론 실증

- 드론을 군이 직접 운용하여 現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무기체계로 소요 제기하여 첨단전력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실증 강화
 - 드론공방전 최초 개최('26년), 드론 전담부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제품에 대한 군 실증을 강화하고, 드론 실증장비 구매 등의 예산 확대
 - 국토부의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사업 결과물 등 군 임무와 연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다부처 실증 협력 강화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 군 실증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군 운용 경험 및 실증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업의 기술발전 지원

3. 드론 신속도입을 위한 제도 혁신

1 첨단전력 획득체계 개선

- AI, 드론, 로봇 등 첨단전력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 없이, 유연하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률」 제정 추진('26년)
 - * (미국 사례) 드론을 소모품으로 보고 저가형 드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생태계를 확장
- (유연한 요구성능) 임무 중심의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업체와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도출
 - * 혁신성·품질 등이 인정된 제품은 소요결정후 바로 구매하고, 최초 배치 후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
- (예산확보) 사업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결정된 소요에 대한 적정 규모의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예산편성 소요기간 단축
- (방위사업 계약특례 활용) 성능·운용 적합성이 검증된 경우, 후속물량에 대한 계속계약 또는 수의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획득기간 단축

2 드론 공급망 체계 혁신

- 드론의 신속·대량 획득을 위해 드론 공급망 체계 전반을 혁신
 - (모듈화) 드론 탄약을 별도 모듈로 개발하여 드론의 신속·대량 획득
 - * 드론본체와 탄약을 분리 획득함으로써 드론 전문기업의 드론 개발역량 집중여건 마련
 - (표준화) 대량생산과 부품 호환을 위해 배터리, 통신규격 등 표준화
 - (인증·조달) 국산화 드론 인증체계 및 온라인 장터 구축 등 추진
 - (국제협력) 美국방드론 장터 한국제품 등록, 한미 공통 표준·인증체계 구축

- (국방 소요) 국방 R&D 활용, 혁신기업·후보기업에 연계 지원 (국방부, 방사청)
 - (데이터 확보) 기업이 군 작전 (훈련)에 참여하여 필요한 실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술력 확보 지원
 - * 군산학 협력센터,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에서 군 핵심 데이터를 우선 접근·활용 지원
 - (국방혁신랩) 첨단분야 선도연구기관*과 국방혁신랩** 컨소시엄 구성 시, 혁신기업·후보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 부여
 - *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
 - ** 과제당 약 200억원 지원하여 체계수준의 시제품 개발 지원
- (공공 소요) 비 국방분야 수요기반* 및 고위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R&D 자금을 집중 지원 (중기부, 산업부, 우주청 등)
 - * 부처(국정원, 우주청, 경찰청, 해경청 등), 민간 소요 등의 연구개발
 - (OTA형 R&D) R&D-실증-구매로 이어지는 OTA와 가장 유사한 구매 연계 R&D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원 (중기부)
 - 민군 Dual-use와 빠른 안보분야 적용,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무빙 타겟(개발목표 변경)을 허용하고, 2단계 (R&D → 고도화실증) 대폭 지원
 - * 구매연계 R&D(현행, 2년 6억원) → 신안보 분야, R&D 20억원/년 + 고도화실증 20억원
- (실증 지원) 혁신기업·후보기업의 개발 기술이 신안보 분야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 (중기부)
 - * 기술사업화 패키지사업 내 안보 분야 실증 전용 트랙 신설
 - 혁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제공 (국방부, 방사청)
 - * (예시) 드론실증부대(36사단), 양평훈련장 등 활용하여 드론 실증 지원
- (연구인력) 혁신기업·후보기업에게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하여 R&D 역량 강화 (중기부)
 - * (현행) 일반 중소기업 최대 5천만원 → (확대) 혁신기업·후보기업 최대 1억원

□ ‘전문 투자기관 (한국형 IQT)’ 신설 (중기부, 방사청 등)

- (목적) 전략분야별 필요로 하는 신기술·핵심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후보기업에 정부가 리스크를 전담하여 직접 투자

※ (참고) 美 IQT 개요

비영리 VC인 In-Q-Tel(IQT, 100% 정부예산)은 조달 이전 단계부터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정부 수요 기반으로 성장을 지원

- (설립) 한국벤처투자 (KVIC)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한국벤처투자 이외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
 - * 투자기관·펀드 관련 정보 비공개,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선임 제한 등 법적근거 마련
- (재원) 중기부·방사청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하여 ‘27년 500억원 조성 후, 4년간 매년 추가로 재원 마련 (정부재원 100% 조성)*
 - * (‘27) 중기부·방사청 각 250억원
- (투자) 정부와 전문 투자기관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합동 투자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혁신기업·후보기업에 투자
 - * 펀드 출자자 구성 : 정부 100% (전문 투자기관 1% 포함)
 - ** 투자 회수금 배분은 펀드 지분율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투자 회수금은 100% 재투자

□ 단계별 투자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 기술개발 지원

- (초기투자) 혁신기업·후보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자금공백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완료까지 자금을 지원
- (후속투자) 기술개발 완료 후에 실증 테스트, 보안 분야 적용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
 - 필요시 방산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후속 투자금 확충
 - * 방산기술혁신펀드(‘26~’28, 3.1천억원, 방산 R&D 예치은행)

※ 보안수준, 민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민간 VC와 공동 투자 검토(필요시)

- (지재권 보장) 정부와 개발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인정 (단, 위원회 심의로 예외적 제한)
 - * NASA와 美 국방부는 스페이스X와 OTA를 통해 핵심 기술인 '로켓 수직 이착륙 및 재사용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기업이 온전히 보유하도록 허용
 - (사업화·상용화)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상용화 지원 (중기부, 국방부)
 - 혁신기업·후보기업의 자체 스케일업 계획에 따라 전략수립, 기술 사업화 등의 패키지 지원 신설 (중기부)
 - * 최대 5년/기업당 10억원, 자부담 50% / 스케일업 서포터 구성 및 1:1 맞춤형 지원
 - AX 스프린트 사업 (상용화 사업) 내 전용트랙을 신설하여 혁신기업·후보기업의 AX 사업 참여 보장 및 전 군 확대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부)
 - (투자)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 지원 (중기부, 금융위 등)
 - 모태펀드 출자 펀드, 방산 정책펀드 등 1조원 이상 규모 펀드 조성
 - * 신설 방산 스타트업 펀드('27~'30, 5천억원, 중기부 모태펀드 활용), K-방산수출펀드 ('26~'27, 1.6천억원, 방사청), 방산기술혁신펀드('26~'28, 3.1천억원, 방산 R&D 예치은행)
 - 민·관 자금이 신안보 분야 등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장기 투자될 수 있도록 특화된 운용사인 「^{가칭}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 설립 지원 (금융위)
 - ①미래원천기술, ②주력산업 부품소재 핵심기술의 R&D, 상용화, 관련 M&A를 통한 글로벌 IP 확보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투입
- ※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우대 지원 (중기부 등)
- (수출 확대) 혁신기업·후보기업의 자체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협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중기부, 방사청)
 - (수출바우처)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式*으로 지원
 - *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인증 등 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자부담 50%~30%)
 - (대기업 협업) 국내 국방 대기업과 혁신기업·후보기업이 함께 해외 수요처 발굴(예 : 방산챌린지) 및 제품 현지화 등 판로개척 활동 지원*
 - * 지원규모 상향 : (기업당) 3천만원 → 5천만원, (컨소시엄) 기업당 ^{일반}5천만원 → 방산1억원

□ 정책 이행을 위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마련 (중기부)

- 전문 투자기관 신설 (한국형 IQT),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26년 발의)

* cf. '20.3월 소부장 특별법 제정 → 소부장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주요 구성(안) >

1. 지원대상(신안보 분야, 기업), 2. 혁신기업·후보기업 지정, 3. 위원회 등 운영체계, 4. 지원계획 수립, 5. 지원내용 및 특례, 6. 펀드 조성 및 운영, 7. 비밀엄수, 8. 벌칙조항

□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 등을 심의하는 범부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설립 (부처 합동)

- 국무총리 회의체로 설치하고, 혁신기업·후보기업 선정, 관계부처·기관 연계 지원 등 심의

* 간사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복수 지정

< 위원회·추진단 구축(안)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중기부·국방부 장관)

심의위원회

(관계부처전문가 구성, 자문/평가/심의 등)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추진단

(관계부처 합동, 중기부 내에 설치)

□ 관계부처 합동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추진단*' 설치 (관계부처)

* 추진단 인력은 중기부와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활용

** 정책수립, 전주기 연계 지원체계 구축 (기업발굴 → 투자·R&D → 실증 → 조달·시장진출)

- 추진단 설치 이전에 '임시 TF (6명)' 운영 (중기부)

□ 국방 관련 예산 통합 관리 (기획처, 관계부처)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과 관련된 전용사업 및 타 사업내 전용 트랙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분류·관리

* '27년 소요예산 검토 시, 기획처 등 관계부처와 국방 관련 예산관리 방안 마련

- 각 부처 제안을 토대로 추진단이 기획처와 협의

IV. 향후 추진계획

- ('26.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지정제도를 운영
- ('27년) 관련 법령 제·개정 기반으로 한국형 OTA 도입, 전문 투자기관 신설, 맞춤형 R&D 지원 등 대책 이행을 본격 추진

<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안) >

주요 과제	일정	부처
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①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	'26.하	중기부, 국방부, 국정원, 방사청 등
②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	'26.하	중기부, 방사청 등
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		
① 한국형 OTA 도입	'27.상	재경부, 중기부 등
② 첨단기술 획득제도 개선	'26.상	국방부, 방사청
3.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① (국방소요) 국방 R&D 연계 지원	'27.1월	국방부, 방사청
② (공공소요) OTA형 R&D, 맞춤 R&D	'27.1월	중기부, 산업부, 우주청 등
③ (공통) 실증 지원, 연구인력 채용 지원	'27.1월	중기부, 국방부 등
4.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구축		
① 전문 투자기관 (한국형 IQT) 신설	'27.상	중기부, 방사청 등
5. 민·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		
① 지재권 보장	'27.상	중기부, 방사청
② 사업화·상용화 지원	'27.1월	중기부, 국방부
③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정책금융 우대	'27.1월	중기부, 금융위 등
④ 수출바우처, 대기업 협업 해외판로 지원	'27.1월	중기부, 방사청
6.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국방부, 방사청), 국가계약법령 개정(재경부)	'26.하	중기부
②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26.하	관계부처
③ 국방예산 분류·관리	'26.하	기획처, 관계부처